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의안 번호	4404
----------	------

발의연월일 : 2024. 9. 27.

발 의 자 : 한창민 · 김 현 · 김재원

복기왕 · 추미애 · 김준형

김남희 · 윤종균 · 김종민

전종덕 · 정태호 · 이해민

이광희 · 박정현 · 송옥주

이용우 · 이학영 · 김한규

윤종오 · 윤준병 · 김 윤

천하람 · 염태영 · 민형배

문정복 · 민병덕 · 임미애

김용민 · 정진욱 · 이재강

정혜경 · 손명수 · 전현희

윤건영 · 황명선 · 용혜인

민홍철 · 이해식 · 강경숙

남인순 · 이수진 · 양문석

오기형 · 박홍배 · 강준현

이재정 · 황운하 · 정준호

김현정 · 서미화 · 박지혜

박희승 · 신장식 · 박주민

이용선 · 김선민 · 채현일

한준호 · 차지호 · 장철민

정춘생 · 한정애 · 김남근

이연희 · 김영환 · 김원이

김성희 · 권향엽 · 박해철
정을호 · 정일영 · 조승래
허성무 · 오세희 · 서왕진
장경태 · 김준혁 · 김동아
서영교 · 이정문 · 조 국
임호선 · 고민정 · 곽상언
진성준 · 송재봉 · 전진숙
김병주 · 최민희 · 황정아
김주영 · 김태년 · 김기표
전재수 · 김영배 · 허 영
박수현 · 김용만 · 위성락
김영진 · 허종식 · 서삼석
이강일 · 정동영 · 박상혁
김영호 · 박홍근 · 서영석
김승원 · 한민수 의원
(110인)

주 문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경제 논리 등을 들어, 기존에 발생한 사회적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후속 안전조치를 마련하여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왔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 참사가 예고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발하여 많은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정부 인정 사망 피해자 1772

명, 생존 피해자 4114 명에 달하는 가슴기살균제 참사와 299 명이 사망하고 5 명이 실종된 세월호 참사가 또다시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복된 참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가슴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참사위원회’)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 48 조제 3 항에 따라 가슴기살균제 참사 및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법령, 제도 등에 대한 개선조치,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피해자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된, 가슴기살균제 참사 분야 26 건, 세월호 참사 분야 32 건, 피해지원 일반 및 기록 관리 분야 22 건의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 대상기관은 가슴기살균제 참사, 4.16 세월호참사 담당부처인 환경부·해양수산부, 안전 대책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법제처, 인사혁신처, 국가정보원 등입니다. 또한 권고 중에는 법률 개정사항도 있어 국회 역시 권고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권고사항의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또한 국회는 보고 받은 이행 정도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기관에 개선을 요구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고 집행 촉구 및 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에 우선 대한민국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국가 재난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 사회적참사위원회가 권고한 국가 차원의 책임 인정과 사과,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후손이 살아갈 사회를 ‘생명 중시’,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19 대국회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책임 있게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점과 함께 국회의원 중 일부와 정치권이 참사 피해자에 대해 혐오 발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았던 점 등에 대해 정식으로 국회 차원의 사과를 함과 동시에, 사회적참사위원회가 국회에 권고한 재난 참사 최소화 및 피해지원 일반 등을 위한 법률 제·개정 및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 점검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더불어, 참사를 반복하지 말자고 했는데도 제 21 대 국회가 생명안전 기본법을 통과시키지 못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등 안타까운 참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제 22 대 국회는 모든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삶을 보호하는 안전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안전이 위협당한 사건이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분을 산 참사임.

이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참사의 원인을 보다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향후 이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참사위원회는 피해자와 미래 세대가 참사의 경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피해의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으며, 참사의 전 과정을 되짚어보며 법·제도상의 미비점을 검토하여, 권고안에 담은 바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국가 재난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참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제안함.

더불어, 참사를 반복하지 말자고 했는데도 제 21 대 국회가 생명안전 기본법을 통과시키지 못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등 안타까운 참

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

제 22 대 국회는 모든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삶을 보호하는 안전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며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다짐 함.